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Online Series CO 12-01

북한은 2012년 1월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 구성은 김일성 사망 다음해인 1995년 신년공동사설처럼, 김정일에 대한 애도 표시와 함께 영도 업적 거론 → 김정은 중심의 결속 강조 → 지난해 업적 평가 → 올해 과제 제시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올해 공동사설은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김정일 유훈을 앞세우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애도 표현이나 김정은 중심의 결속 강조도 당시처럼 "최대의 손실, 가장 큰 슬픔," "령도자 두리에 일심단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등 거의 유사한 수사와 비유로 표현되었다. 아울러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의 수반이며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로 호칭하며 김정은의 승계를 공식화했다.

둘째, 강성대국의 구호가 현저히 감소하고 강성부흥, 강성국가 구호가 이를 대신하는 등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대국 구호는 2010년 16회, 2011년 19회에서 올해 5회로 급감하였다.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장기적 목표로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김일성 탄생 100돌 및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와 관련한 의미 및 중요성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과 업적 찬양, 유훈 관철 등을 역설하였다.

셋째, 2011년도 신년공동사설과 비교하면, 군사문제가 당의 역할 보다 앞서 제시되는 순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군부의 선군혁명에서의 중추적 역할과 강성국가 건설에서의 돌격대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사후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최우선 과제인 경제문제 해결에도 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에 축제 분위기 보다는 동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인민생활향상 → 당의 영도적 역할 → 군(軍)건설 위업 → 대남 → 대외 부문 순서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중앙당의 기능과 역할 확대로 김정일의 지도력을 당조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군정치하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직할통치, 인적통치를 하던 통치행태가 당의 조직과 기능의 부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치사상 강화로 체제단속에 집중하면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가급적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정책 기조는 당국간 대화를 외면한 채 통일전선투쟁 선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2011년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기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유화기조는 없어지고 반정부 투쟁 선동에 치중하고 있다.

대외정책은 친중노선을 걸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기존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에서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이를 이겨냈음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자랑한 실험용 경수로 건설과 원심분리기 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두차례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비핵화, 6자회담, 미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 합의된 24만 톤의 영양 제공이나 3차 미·북 고위급회담은 지속하려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평화체제가 회담의 선결 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정책 전반에 수세적 기조를 보이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북한당국은 새로운 김정은 체제 정착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은 ① 북한상황 관리, ② 도발 경계, ③ 국론결집, ④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관리 모드'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나갈 경우 우리의 정책적 유연성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일 사후 위기의식을 느끼며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안심시킬 필요는 있다. 당국간 대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이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놓되,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

과 변화를 기다린다는 장기적이고 큰 포석으로 담담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반복적인 '상종 거부' 주장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 은폐 및 '애도' 분위기 훼손 방지라는 내부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대남 압박차원의 행태이므로 이에 대한 조건 반사적 반응은 불필요하다.

그보다는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있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거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 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 같은 준 당국차원의 현안 해결을 추진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최근 들어 정부가 보이기 시작한 유연성의 연장선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여전히 '선군'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군사적 리더십에 치중하고 있고, 내부 결속 도모차원에서의 정세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 선거정국을 틈탄 국론분열 책략이 강화될 것이므로, 올해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정책 못지않게 장기적인 대북정책 방향 정립과 함께 국내적인 합의기반을 다지는 일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관계와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한미 이간 책동과 국내적으로 '통미봉남' 우려가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